

[종합·국제]

■ 5·31 지방선거 투표율 51.3%

유권자 무관심 여전...제도 보완 필요

접전지 제주 67.3% 최고, 인천 44.2% 최저

5·31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절반을 간신히 넘긴 것으로 나타나 당초 우려했던 지방선거 사상 최저 투표율을 기록경신은 면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전체 유권자 3천706만 4천 282명(부재자 89만 4천 243명 포함) 중 1천900만91명이 투표에 참여, 전국 평균 투표율이 51.3%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사상 최저였던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때의 투표율 48.9%보다 2.4%포인트 높아져 50%를 턱걸이 상회한 것으로, 2002년 선거 때와 비슷하거나 더 떨어질 것이라는 선관위의 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실시된 전국 단위의 선거인 2002년 16대 대선(70.8%), 2004년 17대 총선(60.2%) 때 투표율에는 크게 못미쳤다. 또 95년 1회 지방선거 투표율(68.4%), 98년 2회 지방선거(52.7%)와 비교하면 지방선거 사상 두번째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셈이다.

■ 지방선거 시·도별 투표율

Table with 5 columns: 지역, 선거인수, 투표인수, 투표율, 3회지방선거, 17대 총선. Rows include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부분의 군 단위지역에서는 단체장 선거를 중심으로 뜨거운 경합이 벌어져 17개 군지역 중 14곳에서 70%를 웃돌았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정치권 불신이 낮은 투표율로 이어졌다고 선거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한 지방선거는 한 명을 뽑는 총선이

광주·전남 지역별 투표율

Table with 4 columns: 지역, 선거인수, 총투표인수, 투표율. Rows include 광주 (합계, 목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and 전남 (지역, 선거인수, 총투표인수, 투표율).

광주 46.3% 저조·전남 64.2% 비교적 높아

전남 기초단체장 경합 치열...14곳 박빙승부

지역별로는 서울(49.2%), 부산(48.1%), 대구(48.3%), 인천(44.2%), 광주(46.3%), 경기(46.2%) 등 대도시와 수도권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초접전 지역으로 분류된 제주의 투표율이 67.3%로 16개 시·도 중 가장 높았지만 또다른 접전지였던 대전은 49.5%로 전국 평균치에도 못미쳤다.

광주지역 평균 투표율은 46.3%에 머문 반면 전남지역은 64.2%로 훨씬 높았다. 농촌지역에서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와 직간접인 관계가 있어 비교적 소상하게 면모를 알 수 있어 투표율이 높았지만 도시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져 벌어진 현상이다.

전남에서는 투표율 78.8%로 최고를 기록한 구례군을 비롯한 대

나 대선과 달리 비례대표 의원직을 포함, 모두 6장의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분산돼 투표율 저하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속성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집권여당이 '한나라당의 싸늘이만은 막아달라'고 호소할 정도로 선거가 초반부터 일방적 관세로 진행된 점도 흥행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선관위는 "투표율 제고를 위해 외국의 사례처럼 투표율 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형사처벌 등 벌칙

을 주고 투표 참여시 공무원 채용의 가산점 부여, 국공립공원 무료 입장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기기자 jkpark@kwangju.co.kr

정부 '피난민에 충격' 서한 美에 확인 요청

정부는 미국이 한국전쟁 중 미군 방어선에 접근하는 피난민들에게 충격을 가할 수 있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존 무초 당시 주한 미국대사의 서한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과 관련, 미측에 서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 관계자는 31일 "무초 전 대사가 미 국무부에 보낸 관련 서한이 실제 존재하는지에 대해 미측에 최근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시절 실시한 노근리 사건 조사에서는 무초 대사의 서한은 언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무초 전 대사의 서한이 정확히 조사가 됐

한국전 당시 무초 주한 미대사 서한 파문 관련 美 국방부 "노근리 학살사건 재조사 방침 없다"

는지를 포함해 몇가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추모비 건립에 119만달러, 장학사업으로 5년동안 매년 56만달러 등 총 399만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측이 같은 제안은 노근리 대책위 등 희생자들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미측은 "예산을 무한정 방치할 수 없다"며 지난 4월 외교통

상부에 공문을 보내 "추모비 건립 및 장학사업 예산의 사용기간이 오는 9월30일 만료될 것"이라는 내용을 통보했으며 외교부는 노근리 대책위 등에 이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무초 전 대사의 서한이 기존 노근리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지금은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노근리 양민학살사건은 = 6·25 전쟁 직후인 1950년 7월 미군이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철교 및 속칭 쌍굴다리에 피신해 있던 인근 마을 한국인 양민 300여명을 사살한 사건. 1999년 9월 미국 AP통신은 당시 미군은 노근리 부근에서 발견되는 민간인을 적으로 간주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이 명령에 따라 학살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부시, 새 재무장관 헨리 폴슨 지명

금융실무·경영능력 탁월 美 경제 '구원투수' 기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사임설이 나온 존 스노 미 재무장관 후임에 헨리 폴슨 골드만삭스 회장(60)을 지명한다고 지난달 30일(한국시간) 발표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스노 장관과 폴슨 지명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

폴슨 지명자는 8년간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CEO)를 맡아온 실물경제 전문가로 부시 대통령이 그를 재무장관에 지명한 것은 고공을 더욱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려는 기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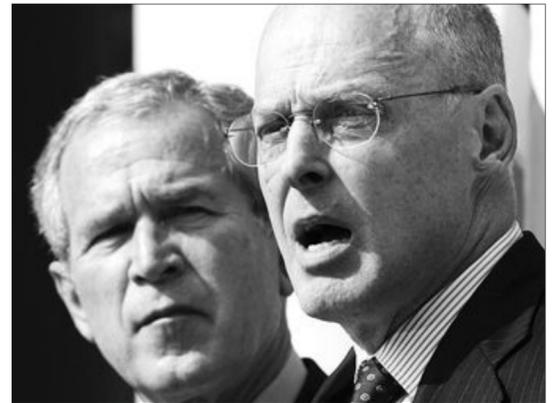
부시 대통령은 폴슨 지명자가 성실한 인물로 주식시장에 해박한 분야 아니라 '평생 비즈니스 경험'이 있으며, 경제문제를 분명한 말로 설명하는 능

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나는 (미국 경제를) 이런 식으로 지속시키기 위해 폴슨과 함께 일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폴슨 지명자는 미국 경제가 "정말 대단하지만, 우리는 이를 당연시해서는 안되며, 세계적인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우량 금융기업으로 손꼽히는 골드만삭스는 폴슨에 앞서 로버트 루빈 회장이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최장수 재무장관을 지낸 바 있으며, 존 코진 전 CEO는 뉴저지 주지사로 진출해 경제부처 수장과 정치인 배출의 산실로 부상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헨리 폴슨(오른쪽) 골드만 삭스 회장의 미 재무장관 지명사실을 밝히고 있다.

전 세계 AI 사망자 130명 육박

WHO, 印尼서 환자 6명 추가 발생

전 세계 조류인플루엔자(AI) 사망자가 130명선에 접근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최신 집계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AI 감염자 6명이 확인되고 이 가운데 3명의 숨짐에 따라 전세계의 사망자는 127명, 감염자는 224명으로 각각 늘어났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올해들어 AI감염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국가로, 감염자수로 따지면 베트남 다음으로 많다.

WHO는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 인체간 전염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의 자바주에서는 최근 일가친척 7명이 동시에 AI에 감염돼 인체간 전염이 일어났을 지 모른다는 추측이 나온 바 있다.

WHO는 이들이 긴밀하게 접촉하면서 간호를 했기 때문에 조류 접촉이 아니라 인체 접촉을 통해 AI에 걸렸을 수 있지만 유전자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바이러스가 인체간 전염을 할 수 있도록 돌연변이를 일으키지는 않은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차기 총장 靑 출신이어야"

이안 유엔사무총장 밝혀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30일 차기 사무총장은 아시아 출신이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차기 후보에 대한 질문에 "아시아 출신이어야 한다는 것 외엔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난 총장은 유엔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아시아 순방기간 일본에서 반기문 외교장관과 태국, 스리랑카 등 아시아 3개국 출신 후보를 만나봤다며 이렇게 말하고 "최적임자가 선출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7·9 공무원, 남경철직, 인 공개사, 전남고시학원

전립선 J2V, 대진바이오메디칼 호남지사

지붕·옥상을라브 우리만큼 방수전문, 태양주방개발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담양한과에서, 시제·제사상을 차려드립니다